

자치분권 실현 위해 '한마음'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익산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결의대회 개최

광역중심의 재정분권 등 현실에 걸맞지 않은 자치분권 추진에 대해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전제로 하는 재정분권의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전북도민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6일 익산시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전북도 14개 시군 시장, 군수, 의장, 전북도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의 중요함을 도민과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가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회(대표회장 염태영)와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지원,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가 함께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행사의 배경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정현을 익산시장의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정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강인재 원장의 강연, 결의문 낭독, 카드섹션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이 바라는 지방분권 국가 건설을 위해 ▲중앙-광역-기초의 수평적 협력 관

계 인식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재정분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중앙정부의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등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촉구하며, 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황숙주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산어촌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발전,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국제 지방세 비율의 7:3 조정의 재정분권 실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동 대비 정비태세 점검하는 김현주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일 김제 백곡배수장을 방문해 대동 대비 정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환경 개선 통해 사람 찾는 농촌 조성한다

전북도, 농촌개발 신규 공모 28개 지구 선정... 854억원 확보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개발분야 신규지구 공모에 28개 지구가 선정되어 854억원(국비 597, 지방비 257)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공간의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 어디서든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촌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목표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입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3개 분야 28개 지구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1개소 180억원 △기초생활거점 16개소 643억원 △시군역량강화 11개소 31억원이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읍소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봉동읍이 선정되어, 주민 자치활동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강골 문화나눔센터,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야외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문화놀이공원, 문화여가 분야 전문가 교육을 위한 문화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0년부터 5년간 180억원(국비 126, 지방비 54)이 투자된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

드는 사업으로 16개소에 643억원(국비 450 지방비 193)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시설(다목적마당, 도로 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마을 경관 가꾸기, 생태원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업지구의 마을주민 역량강화 등 각종 S/W사업 추진을 위해 31억원을 확보했다.

전북도와 시·군은 그동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지구별로 대학 교수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도·시군 담당자 및 마을대표 간 워크숍을 개최해 아이디어 발굴 및 사전 프리젠테이션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마을주민, 정치권, 시군과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여 얻어낸 결과로 지속적인 농촌개발을 통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전북도 핵심 농정시책의 하 나인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추석연휴·가을여행주간 여행객 유치에 박차

전북도는 추석연휴와 가을여행주간 여행객을 전북으로 초대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전북투어패스 현장 프로모션, 축제장 길거리 홍보마케팅과 전북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경품이벤트 등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가을축제와 투어패스를 연계하고, 찾아가는 이동관광안내소와 함께 지난 6일 서울대공원에서 수도권 잠재 관광객을 끌어모은 것에 이어, 11일에는 여산휴게소에서 추석맞이 귀향객을 가을여행 전북으로

초대하는 공동 현장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서울대공원은 서울동물원과 서울랜드, 캠프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종합 테마파크로서 연 방문인원이 217만3000명(2018년)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고, 여산휴게소는 추석맞이 전북 귀향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로써, 가을여행 전북으로 초대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도는 이곳에서 전북 투어패스와 함께하는 가을축제를 소

개하고, 다양한 참여형 경품 이벤트 실시해 전북여행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전북투어패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추석 명절 14개 시군 주요역과 터미널 근처에 귀성객 환영 현수막을 설치해 전북지역 방문에 대한 고항사람들의 고마움을 전하고, 방문객들의 전북방문 감성을 자극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전북투어패스와 함께 전북여행을 즐긴 인증샷을 개인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와 SNS 추수를 댓글로 남기면 주유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초읽기'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가 초읽기에 들어 가면서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도는 6일 국제마스터스게임협회(이하 IMG)로부터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신청 접수결과 '단일접수, 단독후보'에 올랐음을 공식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도의 '단일접수, 단독후보'라는 남보는 타 경쟁국이 2022년 대회 개최지로서의 '절대우위, 경쟁불가'인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지위확보에 스스로 유치신청을 포기하거나 2026년 3회 대회 유치를 전략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후보 도

시로 '단독후보'에 오르게 된 전라북도는 '오래 준비와 유망의지'의 승리로 평가하면서도, 대회 최종유치를 위해 기 제출한 유치계획서의 신뢰여부를 심사하는 IMG의 '적격심사'를 남겨 놓고 있는 상태에서 유치계획서 작성부터 함께 해오고 있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위한 마비지 작업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효율적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

전북연구원, 주거복지정책 총괄 전담기관 설립 제안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전라북도 주거복지센터' 설치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는 종류가 많고 절차도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전달해주고, 시·군이나 LH 등의 공공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광역단위의 총괄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진성)은 지난 6일 '전라북도 주거복지정책 총괄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이슈브리핑(2016호)을 통해 광역 차원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시민과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전라북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전북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개보수 지원,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추진

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전담기관이나 지원 방식, 추진 체계가 각각 달라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요 공급자간의 연계 부족이나 서비스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도차원에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 주민과 밀착하여 상담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기본적으로 각 시군별로 설치되어 주민 가까이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맥락에서 2017년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설립·운영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대구광역시, 수원시와 시

흥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정책 발표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주거복지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경기도, 제주도에서 광역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도 주거복지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에는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물론 광역차원의 주거지원센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구책임자인 전북연구원 장성화 박사는 "주거복지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며 "광역센터를 설치해 전북도 주거복지 관련 정책·사업을 총괄·지원하면서, 점진적으로 각 시·군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성과를 고려해 관련 기능이나 조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은 올 하반기에 정책연구 과제를 통해 전북도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